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616
----------	------

발의연월일 : 2024. 11. 15.

발 의 자 : 김 윤 · 서미화 · 박해철
박희승 · 박지원 · 박홍배
윤종오 · 문진석 · 정혜경
이광희 · 문금주 · 전진숙
이개호 · 전종덕 · 강준현
김남근 · 남인순 · 서영석
백혜련 · 이수진 · 장종태
의원(21인)

제안이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시장에 맡겨진 비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함.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는 공공보건의료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고,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체계가 부재한 상황임. 또한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 · 장비 ·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공공보건의료 역량 자체가 열악한 상황임.

이에 진료권 중심의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기전을 마련하고, 각 의

료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보편적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함.

주요내용

- 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진료권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계획 수립, 계획의 심의·의결 및 평가에 대한 과정을 명시함(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등).
- 나.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로 명시하고,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함. 중앙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시·도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는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지원 업무를 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 다. 진료권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취약지를 진료권 단위로 지정하도록 하고, 거점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2 신설 등).
- 라.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를 구성할 때에는 공익위원을 임명하도록 함(안 제7조의2 및 제13조의2 신설).
- 마.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수가가산과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6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617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자목을 차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마목 중 “보건 의료기관 중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

나.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 생활지원센터

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라.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

자. 제7조의2에 따른 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

6. “진료권”이란 의료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충족하는 의료생활권으로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구, 의료이용 접근성, 의료기관 기능 유형에 따른 자체충족률을 고려하여 대·중·소 진료권을 구분하여 지정·고시하는 행정구역의 묶음을 말한다.

제3조제3항 중 “시행할 수 있다”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진료권을 기반으로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5. 진료권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역할 및 운영계획
8. 진료권 공공보건의료기관 재정지원 추진계획 및 방법
9. 제5조의3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성과평가 및 제15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
10.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 세출 및 제22조의5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정책수가 가산에 관한 사항
11.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효율적 운영 및 협력·연계 계획
1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3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수급관리 및 실태조사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공

공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보건의료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① 시·도지사는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고 진료권별 공공보건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료권 단위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료권별 공공보건의료 목표, 세부 계획 및 추진방안
2. 진료권별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그 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운영 계획
3. 진료권별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확충 계획
4. 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사업 수요·공급 조정
5. 제22조의3에 따른 자금지원 재원 사용·배분 계획
6. 진료권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 계획
7. 진료권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계획
8. 제5조의3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성과평가 및 제15조에 따른 공공

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9. 공중보건직의사의 전문과목과 소진료권 유형에 따른 배치기준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5조의2에 따른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5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그 시행계획을 최종적으로 심의한다.

④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분석·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진료권을 기반으로 3년마다 공공보건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중·소 진료권별 인구수 및 의료수요 대비 공공보건의료 병상·인력·시설 등 공급의 적정성
2.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확충이 필요한 진료권 현황
3.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질 개선 현황
4. 국민의 보편적 의료이용 현황
5. 공익사업 수요 및 공급 현황, 향후 추계
6. 인구 수, 성별·연령별 인구 분포, 소득 등에 따른 진료권 내 의료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7.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의료기관 접근성에 관한 사항
8.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 및 경영실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심의하기”를 “심의·의결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한다”를 “심의·의결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분과위원회”를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자단체, 노동자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장
4.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의 원장 중 대표자
5. 권역별로 설치·운영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 의료기관의 장 중에 대표자
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원장 중 대표자
7.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시·도지사협의체 대표
5.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공익적 적자 계측 기준 및 방법
7.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심의만 한다.

1. 국공립대학병원 및 국공립대학치과병원 운영 분과위원회
2. 지방의료원 운영 분과위원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분과위원회

제5조의2제1항 중 “심의하기”를 “심의·의결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지역”을 각각 “진료권”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도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중진료권별 시장·군수·구청장 중 대표자
2. 대진료권별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의 장 중 대표자
3.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 중 대표자
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장 중 대표자
5. 보건의료관련 환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보건의료관련 노동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7. 보건의료관련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9.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장

5. 제5조의3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6. 제15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7.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과 시설

제2장에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공공보건의료 성과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의 강화를 위하여 진료권별 공공보건의료수요, 공공병상·인력·시설의 공급 등에 관한 공공보건의료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성과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수·의료수요 대비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그 외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의 병상·인력·시설 등의 적정성

2. 진료권 기반 국민의 보편적 의료이용 및 의료질 개선에 관한 사항

3. 시·도별 진료권 중심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대한 사항

4.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운영 및 경영에 관한 사항

5.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진료권 내 공공보건의료 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업무 수행상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성과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사회에서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을 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민간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이 시·도지사가 수립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이 공익사업 또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의 지정 기준·방법 및 절차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가”를 “진료권별로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을 “진료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의2 및 제1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충)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의료취약지(이하 “의료취약지”라 한다)에 대하여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신축·증축·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충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취약지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보건의료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의료 인력의 공급에 대한 지원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의 보조 등

③ 그 밖에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 등의 이사회 구성) ① 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 및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이사회를 구성하는 경우 시·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 전문가
 2. 지역사회 주민 또는 환자의 권익을 대표하는 사람
 3.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 ③ 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 및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4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법인”은 “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 또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본다.
- ④ 그 밖에 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 및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이사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를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및 책임의료기관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시행계획의 수행 결과를 평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진료권 중심 국민의 보편적 의료이용 및 의료질 개선에 관한 사항
2. 진료권 맞춤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적정 공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 제7조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를 제공할 때 발생한 경영상의 손해를 제1항에 따른 평가에 불리하게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해당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장과 해당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20조제3항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각각 “중앙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6호) 중 “제15조제1항에”를 “제15조에”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를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7호) 중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중앙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로,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로,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중앙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로 한다.

6. 제5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업무 지원

7. 제5조의3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성과평가 시행 및 분석

제22조의 제목 중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업무”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각각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로 한다.

1.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진료제공 지원

2.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연계 협력 및 업무 지원

3. 제4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지원

4. 제5조의3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성과평가 및 제15조에 따른 공공

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 지원

5. 진료권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교류·협력 지원
6. 진료권 특성 맞춤 공공보건의료 사업 발굴
7. 진료권 공공보건의료 관련 정책 개발 및 연구
8.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지원
9. 공공보건의료 종사자 교육, 훈련 지원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장의2(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지원

제22조의2(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①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필수의료기금
2.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
3.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제22조의3(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 세출) ①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 운영

2. 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 우선 제공
 3. 제7조의2에 따른 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4.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5.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지원
 6. 제14조의2에 따른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7. 제5조의3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성과평가 및 제15조에 따른 공공 보건의료 수행기관 평가에 따른 지원
 8. 제21조에 따른 중앙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및 제22조에 따른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9.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중보건 위기 상황 시 대응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사항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경우 지역의 인구수, 사회경제적 상황, 지역의 필수의료 취약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2조의4(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재원)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 운영

2. 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 우선 제공
3. 제7조의2에 따른 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4.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5.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지원
6. 제14조의2에 따른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7. 제5조의3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성과평가 및 제15조에 따른 공공 보건의료 수행기관 평가에 따른 지원
8. 제21조에 따른 중앙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및 제22조에 따른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9.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중보건 위기 상황 시 대응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필수의료기금
2.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

③ 제1항제9호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시·도필수의료위원회에서 회복이 되었다고 판단할 때까지 지원한다.

④ 그 밖의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5(공공보건의료정책수가 가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권

단위의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정책수가를 가산하여야 한다.

② 공공보건의료정책수가의 가산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성과 가산: 진료권 중심 국민의 보편적 의료이용 및 의료질 개선에 관한 사항

2. 공공보건의료정책가산: 시·도위원회에서 결정한 각 진료권별 공익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제공 가산

3.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가산: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지정 공공보건의료 가산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정책수가 가산기준을 정할 때 제5조의3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성과평가 및 제15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정책수가의 가산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6(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공익적 적자 계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4호가목·나목·다목·마목·바목·사목·아목·자목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 공공보건의료사업 등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공익적 적자를 계측하여 그 적자를 전부 지원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적 적자 계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업무 수행상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공익적 적자 계측 방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 <u>공공보건의료기관</u> ”이란 <u>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u>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 <u>공공보건의료기관</u> ”이란 <u>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u> <u>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u> <u>나.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u> <u>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u> <u>라.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u>

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가. ~ 아. (생략)

<신설>

자. (생략)

5.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 간의 역할 수행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가. ~ 라. (생략)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제외한 보건의료기관 중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신설>

4. -----

-----.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제7조의2에 따른 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

차. (현행 자목과 같음)

5. -----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6. “진료권”이란 의료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충족하는 의료생활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구, 의료이용 접근성, 의료기관 기능 유형에 따른 자체충족률을 고려하여 대·중·소 진료권을 구분하여 지정·고시하는 행정구역의 묶음을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② (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주요 시책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시행하여야 한다.

④ -----

----- 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①

-----진료권을 기반으로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하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략)

<신설>

5.·6.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진료권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의 역할 및 운영계획

6.·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8. 진료권 공공보건의료기관 재
정지원 추진계획 및 방법

9. 제5조의3에 따른 공공보건의
료 성과평가 및 제15조에 따
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

10.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보건
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
세출 및 제22조의5에 따른 공
공보건의료정책수가 가산에
관한 사항

11.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효율적 운영 및 협력·연계
계획

<신 설>

7. (생 략)

③ (생 략)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5조의2에 따른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과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 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3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수급관리 및 실태조사

13. (현행 제7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4조의2(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① 시·도지사는 양질의 공공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진료권별 공공보건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료권 단위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료권별 공공보건의료 목표, 세부 계획 및 추진방안
2. 진료권별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그 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운영 계획
3. 진료권별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확충 계획
4. 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사업 수요·공급 조정
5. 제22조의3에 따른 자금지원 재원 사용·배분 계획

6. 진료권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 계획

7. 진료권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계획

8. 제5조의3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성과평가 및 제15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사업 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9. 공중보건의사의 전문과목과 소진료권 유형에 따른 배치기준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5조의2에 따른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5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그 시행계획을 최종적으로 심의한다.

④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분석·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의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진료권을 기반으로 3년마다 공공보건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중·소 진료권별 인구수 및 의료수요 대비 공공보건의료 병상·인력·시설 등 공급

의 적정성

2.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확충이 필요한 진료권 현황

3.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질 개선 현황

4. 국민의 보편적 의료이용 현황

5. 공익사업 수요 및 공급 현황, 향후 추계

6. 인구 수, 성별·연령별 인구분포, 소득 등에 따른 진료권 내 의료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7.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의료기관 접근성에 관한 사항

8.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 및 경영실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

제5조(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③ (생략)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략)

2.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3.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런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① -----

-----심의·의결하기-----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1. (현행과 같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자단체, 노동자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4. (생 략)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장

4.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의 원장 중
대표자

5. 권역별로 설치·운영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의료기관의 장 중에 대표
자

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
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
방의료원의 원장 중 대표자

7.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시·도지사협의체 대표

8. (현행 제4호와 같음)

⑤ -----
-----심의·의결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공익적 적자 계측 기준 및
방법

7.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
서 심의·의결한 사항. 이 경
우 심의위원회는 심의만 한
다.

5. (생 략)

⑥ (생 략)

⑦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⑧ (생 략)

제5조의2(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신 설>

8. (현행 제5호와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
-----.

1. 국공립대학병원 및 국공립대학치과병원 운영 분과위원회
2. 지방의료원 운영 분과위원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분과위원회

⑧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① -----
-----심의·의결하기-----

-----.

② 시·도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

② 시·도위원회는 해당 시·도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2. (생략)
3.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중진료권별 시장·군수·구청장 중 대표자
2. 대진료권별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의 장 중 대표자
3.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 중 대표자
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장 중 대표자
5. 보건의료관련 환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보건의료관련 노동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7. 보건의료관련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9.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장

④ -----

-----.

1. 2. (현행과 같음)
3. 진료권-----

4. 진료권-----

및 사업의 조정

<신 설>

<신 설>

<신 설>

5. (생 략)

③ (생 략)

<신 설>

5. 제5조의3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6. 제15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사업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7.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과 시설

8. (현행 제5호와 같음)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5조의3(공공보건의료 성과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의 강화를 위하여 진료권별 공공보건의료 수요, 공공병상·인력·시설의 공급 등에 관한 공공보건의료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성과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수·의료수요 대비 공공 보건의료기관 및 그 외 공공 보건의료 수행기관의 병상·인력·시설 등의 적정성

2. 진료권 기반 국민의 보편적
의료이용 및 의료질 개선에
관한 사항

3. 시·도별 진료권 중심 공공
보건의료 확충에 대한 사항

4.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운영 및
경영에 관한 사항

5.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진
료권 내 공공보건의료 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
사는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의 제출이나 업무 수행상의 협
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
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
사는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
한 재정 지원 시 성과평가 결

<신 설>

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성과
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사회
에서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있
는 민간의료기관을 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민간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
이 시·도지사가 수립한 공공
보건의료 시행계획에 따라 공
공보건의료사업을 공공보건의
료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공익참여 민간의료기
관이 공익사업 또는 공공보건
의료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제12조(의료취약지의 지정·고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주기적으로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분석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분석 결과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의료취약지 (이하 “의료취약지”라 한다)에 대하여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의료 인력의 공급에 대한 지원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의 지정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료취약지의 지정·고시)

① -----

-----진료권별로
평가-----.

1. ~ 4. (현행과 같음)

② -----

진료권-----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의 보조 등

⑤ (생략)

<신설>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2조의2(의료취약지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의료취약지(이하 “의료취약지”라 한다)에 대하여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보건 의료기관을 신축·증축·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충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취약지의 공공보건 의료기관이 보건의료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의료 인력의 공급에 대한 지원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의 보조 등

<신 설>

③ 그 밖에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 등의 이사회 구성) ① 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 및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이사회를 구성하는 경우 시·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 전문가
2. 지역사회 주민 또는 환자의 권익을 대표하는 사람
3.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

제15조(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 결과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및 책임의료기관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③ 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 및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4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법인”은 “공익참여 민간 의료기관” 또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본다.

④ 그 밖에 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 및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이사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및 책임의료기관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시행계획의 수행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또는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또는 책임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표하거나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야 한다.

1. 진료권 중심 국민의 보편적 의료이용 및 의료질 개선에 관한 사항

2. 진료권 맞춤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적정 공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 제7조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를 제공할 때 발생한 경영상의 손해를 제1항에 따른 평가에 불리하게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해당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장과 해당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재정

<p>④ (생 략)</p> <p>제20조(교육·훈련 등) ①·② (생 략)</p> <p>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센터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④ (생 략)</p> <p>제21조(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u>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u>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1. ~ 4. (생 략)</p> <p><신 설></p> <p><신 설></p> <p>6.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p> <p>7.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p>	<p><u>적·행정적 지원을 다르게 할 수 있다.</u></p> <p>⑤ (현행 제4항과 같음)</p> <p>제20조(교육·훈련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하 여야 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제21조(중앙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 -중앙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p> <p>1. ~ 4. (현행과 같음)</p> <p>6. 제5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의 업무 지원</p> <p>7. 제5조의3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성과평가 시행 및 분석</p> <p>8. 제15조에-----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p> <p>9. -----시·도</p>
--	--

건의료 지원단 간의 교류·협력 지원

8.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신설>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10.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
-----중앙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
-----지원
하여야 한다.

③ -----중앙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

제22조(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

다음 각 호의 업무-----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진료 제공 지원

2.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연계

<p><u><신 설></u></p>	<p><u>협력 및 업무 지원</u></p>
<p><u><신 설></u></p>	<p>3. 제4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u>지원</u></p>
<p><u><신 설></u></p>	<p>4. 제5조의3에 따른 공공보건의 료 성과평가 및 제15조에 따 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 지원</p>
<p><u><신 설></u></p>	<p>5. 진료권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u>교류·협력 지원</u></p>
<p><u><신 설></u></p>	<p>6. 진료권 특성 맞춤 공공보건 의료 사업 발굴</p>
<p><u><신 설></u></p>	<p>7. 진료권 공공보건의료 관련 <u>정책 개발 및 연구</u></p>
<p><u><신 설></u></p>	<p>8.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u>지원</u></p>
<p><u><신 설></u></p>	<p>9. 공공보건의료 종사자 교육, <u>훈련 지원</u></p>
<p><u><신 설></u></p>	<p>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u>정하는 사항</u></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공 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그 밖에 공공보건의 료 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 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p>	<p>② -----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 ----- -----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p>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 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

-.

③ -----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하여야 한다.

④ -----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

제4장의2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지원

제22조의2(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①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

<신 설>

별법」에 따른 지역·필수의
료기금

2.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

3.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제22조의3(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 세출) ① 공공
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회
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제3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
계 구축·운영

2. 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관의 보건의료 우선 제공

3. 제7조의2에 따른 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4.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5.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
센터에 대한 지원

6. 제14조의2에 따른 책임의료
기관에 대한 지원

7. 제5조의3에 따른 공공보건
료 성과평가 및 제15조에 따

<신 설>

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평가에 따른 지원

8. 제21조에 따른 중앙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및 제22조에 따른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9.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중보건 위기 상황 시 대응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경우 지역의 인구수, 사회경제적 상황, 지역의 필수의료 취약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2조의4(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재원)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

2. 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관의 보건의료 우선 제공

3. 제7조의2에 따른 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4.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5.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

센터에 대한 지원

6. 제14조의2에 따른 책임의료

기관에 대한 지원

7. 제5조의3에 따른 공공보건의

료 성과평가 및 제15조에 따

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평

가에 따른 지원

8. 제21조에 따른 중앙 공공보

건의료 지원센터 및 제22조에

따른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

원센터에 대한 지원

9.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중보

건 위기 상황 시 대응으로 발

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

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

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

별법」에 따른 지역·필수의

료기금

<신 설>

2.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

③ 제1항제9호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은 「필수의료 강화
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
른 시·도필수의료위원회에서
회복이 되었다고 판단할 때까
지 지원한다.

④ 그 밖의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

제22조의5(공공보건의료정책수가
가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
료권 단위의 공공보건의료 강
화를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수
행기관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정
책수가를 가산하여야 한다.

② 공공보건의료정책수가의 가
산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1. 성과 가산: 진료권 중심 국
민의 보편적 의료이용 및 의
료질 개선에 관한 사항

2. 공공보건의료정책가산: 시·
도위원회에서 결정한 각 진료

<신 설>

권별 공익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제공 가산

3.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가산: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지정
공공보건의료 가산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정책수가 가
산기준을 정할 때 제5조의3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성과평가
및 제15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
과를 반영하여 지급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정책
수가의 가산에 관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6(공공보건의료 수행기
관의 공익적 적자 계측) ①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4
호가목·나목·다목·마목·바
목·사목·아목·자목의 공공
보건의료 수행기관이 공공보건
의료사업 등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공익적 적
자를 계측하여 그 적자를 전부

지원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적 적자 계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업무 수행상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공익적 적자 계측 방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